

교육

개 관	307
교육정책	308
유아 · 초 · 중등교육	311
고등교육	312
교육계 동향	312

2016

연합연감

교육

개관

■ 교육여건 개선 노력 지속

교육부는 2020년까지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1명으로, 중·고등학교는 23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2010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다.

교육부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별 학생 수 변화 추이, 학급 증설을 위한 가용교실 현황과 증축 가능 교실 수, 학교 신설계획 등을 파악했다. 또,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와 교원 장기 공급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2001년 7월부터 추진됐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1조5천264억원을 투입하고, 초·중등교원을 2002년과 2003년에 2만3천600명 늘렸다.

정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력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22.6명, 중학교 28.9명, 고등학교는 30.0명으로 각각 줄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08년 처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2004년 완성됐다. 이를 위해 2002년 2천664억원, 2003년 5천328억원, 2004년 7천993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됐다.

대입과 관련해서는 2년 연속 불거진 출제 오류 사태를 막기 위해 2016학년도 수능부터 출제위원 중 특정대학 출신의 편중 현상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됐다. 또 '쉬운 수능' 기초를 이어 간다는 방침에 따라 난이도를 전년도 수준으로 조절하고 EBS

교재와의 연계율을 높이는 정책도 유지됐다.

■ 교육과정 개편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구분없이 공통으로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의 과목이 신설되고 초·중·고등학교 수업에서 수학, 영어를 비롯한 교과별 학습 부담이 줄어드는 등의 내용을 가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됐다.

교육부가 9월 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따르면 개정 교육과정은 수학, 영어를 비롯한 교과별 성취기준을 현재보다 20% 가까이 줄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의 암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대학입시와 맞물려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를 양산한다고 지적돼온 수학 학습량이 대폭 줄어든다. 또 수학 교과에서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을 신설해 교육과정을 벗어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어도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교육으로 바뀐다. 초·중학교에서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두는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읽기와 쓰기 학습을 강조했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전반에서 다루는 '범교과 학습주제'는 현재 39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한 점도 주목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 늘리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체험 중심의 '안전생활' 교과를 편성하도록 했다. 3~6학년은 체육, 실과 등의 교과에 '안전' 단원이 신설된다.

또 한글 공부가 부족한 학생을 위해 1~2학년이 받는 한글

교육을 현행 27시간에서 45시간 이상으로 늘렸다.

연극 교육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초등학교 5~6학년 국어에서는 연극 대단원이 개설되고 중학교 국어에는 연극 소단원이 신설된다. 고등학교에서는 보통교과의 일반선택 과목에 '연극'이 새로 포함된다.

교육정책

■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2013년 9월부터 전국 중학교 42곳에서 시범 운영돼 온 자유학기제가 2015년에는 전체 중학교의 70%(약 2천230곳)로 확대, 운영됐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의 한 학기를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로 삼게 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해당 학기 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없앴다. 대신 학생 스스로 점검하는 자기성찰 평가, 교사가 수업과정 중 평가하는 형성평가 등을 시행한다.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재한다.

교과별 수업시수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기본교과는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충실히 가르치되 토론과 실험, 실습, 현장체험, 프로젝트 학습 등 자율과정을 강화한다.

또 학기에 2회 이상 종일체험활동을 실시하고 학생이 진로 체험을 계획하면 학교가 출석으로 인정하는 자기주도 진로 체험도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한다. 예체능과 기본교과를 융합한 수업, 교사 여럿이 가르치는 공동수업, 수업시간을 두세 시간씩 묶는 수업, 진로캠프, 사회인사 특강 등도 진행할 수 있다.



▲ 9월 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수곡중 1학년 학생들이 청주지법이 마련한 자유 학기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섰다.

교육부가 2015년 11월 확정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계획에 따르면 자유학기 활동은 170시간(주당 10시간) 이상 편성하고 지필 시험 방식의 평가를 시행하지 않으며, 자유학기 기간에 2회 이상 진로체험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해 학교당 평균 2천만 원 내외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자유학기제 강사 초빙과 현장학습 지원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또 전국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을 위해 11월 기준으로 전국 7만8천993개 체험장의 16만3천613개 프로그램을 확보한 상태다. 공공·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험처를 확보하고 프로그램 질·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산·어촌 중학교들의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공공·민간이 제공하는 양질의 진로체험 지원 프로그램을 이들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양질의 프로그램이 부족한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 '진로체험버스' 대상 학교를 368개교에서 2016년 1천28개교로 늘리고,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3~2015년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학생의 자기표현력, 학교 구성원 간 친밀도 등이 높아져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인성교육 강화

2014년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후속으로 교육부는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잇따라 제정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17년부터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은 인성관련 과목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교대와 사범대가 교직과목, 교양, 전공 중 한 분야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17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편입생, 재입학생은 2019학년부터 적용된다.

또 교육부가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지원, 인성교육 실태조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는 인성교육진흥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은 새로 개발된 것으로 한정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은 교원연수기관이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할 경우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을 총 이수시간의 10% 이상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종합계획의 달성 정도를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당시 참사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물질 만능·이기주의 등의 풍조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자성을 바탕으로 2014년 5월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